

# 韓國經濟發展 四十年

## — 그 特性과 問題點 —

趙 淳\*

〈目 次〉

- I. 序 言
- II. 韓國經濟發展의 概觀
- III. 壓縮成長의 要因
- IV. 壓縮成長과 不均衡構造
- V. 結 語

### I. 序 言

本稿의 目的은 지난 四十年동안의 韓國經濟發展의 特性과 問題點을 오늘의 視角에서 再吟味하고자 함에 있다.

韓國經濟發展에 대한 分析 및 그 發展要因에 대한 研究는 대단히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글을 쓴다는 것은 그 視角이나 方法이 既存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不必要한 蛇足에 不過할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筆者가 그 視角과 方法이 반드시 새롭다고는 할 수 없는 이 글을 쓰는 理由는 韓國經濟가 지금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뚜렷한 轉換點에 서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轉換點의 視角에서 지난 날의 經驗을 다시 한번 眺望해 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歷史的 經驗에 대한 認識도 歷史의 進展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歷史라고 불리는 過去 經驗의 記錄은 個人에 관한 것이나 國家에 관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單純히 客觀的인 事件의 堆積物일 수는 없다. 歷史의 의미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理解가 오늘에 대한 우리의 認識과 未來에 대한 우리의 設計에 寄與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歷史는 그 自體의 進行過程에서 不斷히 새로운 角度에서 再檢討되어야 하는 屬性을 지니는 것이다.

韓國經濟는 현재 對內的으로는 民主化, 對外的으로는 國際化의 要求에 適應하여야 할 필요성에 直面하고 있다. 이런 要求의 本質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對處하여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問題意識에 서서, 다시 한번 韓國經濟의 發展過程의 特性을 고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찰하고 將來의 課題를 展望하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지난 四十年동안의 韓國經濟의 發展을 東北아시아型的 資源賦存을 가진 後發資本主義經濟의 壓縮成長過程의 類型으로 理解하고, 그것이 지니는 構造的인 特徵은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위한 經濟政策의 結果로 認識하고자 한다. 이러한 基本視角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筆者의 獨創的인 着想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그것은 韓國經濟를 오직 閉鎖經濟의 發展模型의 視角에서 보거나, 또 어떤 歷史主義的인 視角에 맞추어서 理解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的인 視角에서 그리고 또 經濟發展이란 그것을 追求하는 經濟主體(政府, 企業 및 勤勞者 등)의 意識的인 作爲의 結果로 理解하고자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韓國經濟發展의 基本要因과 그 展開過程은 資源의 賦存이 비슷한 隣國(臺灣 및 日本)의 그것과 比較함으로써 더욱 鮮明하게 그 特性을 理解할 수 있고, 隣國에서는 찾을 수 없는 韓國經濟의 몇 가지 特性은 그 高度成長期를 주름잡은 가장 強力한 經濟主體(즉 政府)의 役割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그것과 달랐다는 데에 가장 큰 原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第2節에서는 韓國經濟發展의 主要 巨視的 特徵을 考察하되, 어느 정도까지는 臺灣과 日本의 그것과 比較·檢討한다. 第3節에서는 先進經濟의 發展을 ‘壓縮’한 韓國經濟發展의 要因을 살펴보고, 第4節에서는 韓國經濟發展의 構造的 내지 微視的 側面을 주로 그것을 만들어 낸 政府政策을 中心으로 考察한다. 第5節에서는 위의 두 節의 論議가 含蓄하는 將來에 대한 展望을 몇 가지 摘記함으로써 結論에 대신한다. 本稿에 行하는 論議와 主張은 엄밀한 檢證의 기초위에 서있지 못하며, 또 三國의 比較에 있어서도 보다 周到한 考證을 要하는 點이 十의 八, 九가 될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一種의 試論的인 性格의 것에 不過하며, 따라서 筆者는 이것이 이 문제에 關心있는 學者의 보다 次元높은 研究를 위한 하나의 參考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 II. 韓國經濟發展의 概觀

일찌기 쿠즈네츠(Simon Kuznets)教授는 現代經濟成長의 特徵을 i) 매우 빠른 1人當所得의 增加, ii) 急激한 構造變化, iii) 技術進步에 의한 生産性的 向上, iv) 國際化的 進展의 네 가지로 들었다.<sup>(1)</sup> 지난 40年동안의 韓國의 經濟發展도, 약간의 但書가 필요한 部分이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이러한 4개항의 現代經濟成長의 特徵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1) 쿠즈네츠의 모든 經濟成長論은 이러한 認識에 基礎하고 있으나, 특히 이 特徵에 대하여 重點으로 論한 것으로서는 그의 *Postwar Economic Growth: Four Lecture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Lecture II, pp. 36-68 參照.

〈表 1〉 韓國經濟의 主要指標 (%)

	年平均 經濟成長率	年平均 消費者 物價上昇率	年平均 通貨量 (M <sub>2</sub> ) 增加率	平均 失業率
1954~56	2.7	42.6	—	—
1957~61	4.7	9.6	—	—
1962~66	7.8	19.7	32.3	7.6
1967~71	8.7	15.0	48.7	5.0
1972~76	9.5	20.9	31.2	4.1
1977~81	5.9	19.6	30.2	4.1
1982~87	9.2	4.2	17.2	3.9

資料：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및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에서 作成

壓縮한 形態로<sup>(2)</sup>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 1. 成長率

우선 몇 가지 成長의 記錄을 巨視的으로 鳥瞰해 보자. 〈表 1〉은 1954年~1987年 동안의 期間을 5個年計劃에 맞추어 5年으로 區劃하여 年平均 成長率을 나타낸 것인데,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經濟는 1961年까지는 그 成長率이 비교적 緩慢하였으나, 第1次 5個年 開發計劃이 施行된 1962年을 起點으로 하여 現在에 이르기까지 6次의 計劃이 施行되는 期間 동안에 매우 높은 高度成長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成長率은 開發途上國의 成長史에는 그 類例가 거의 없다. 라틴 아메리카의 新生工業國<sup>(3)</sup>들은 1970年代에는 어느 정도의 成長을 보였으나, 1981年~83年동안에는 계속 負의 成長率을 記錄하였다가 84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우 年平均 4% 정도의 低成長率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新生工業國들중에 韓國과 같은 높은 成長率을 보인 나라는 오직 臺灣뿐이다.<sup>(4)</sup> 〈表 2〉에는 〈表 1〉에 있어서와 똑같은 5年區分으로 臺灣의 主要成長指標를 收錄하였는데,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臺灣은 1970年代末까지는 全期間을 통하여 韓國보다 오히려 높은 成長率을 成就하였다. 最近 數年 동안에도 臺灣은 韓國과 같이 두 자리의 成長率을 維持하고 있다.

先進國의 發展過程의 歷史를 보아도 오늘의 韓國(및 臺灣)과 같은 높은 成長率을 보인 事例는 없다. 1860年代부터 一次大戰까지의 先進國의 年平均 成長率을 보면<sup>(5)</sup> 가장 높았던

(2) 大川一司教授가 一般的으로 開發途上國의 過程을 考察할 때 이 表現을 썼다. 그의 『經濟發展と 日本の經驗』, 大明堂, 1970, p.33 參照

(3) 南美的 新生工業國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이며, 여기의 成長率은 이 나라들의 單純平均을 나타낸다.

(4) 香港·싱가포르도 높은 成長率을 보였으나, 이들은 都市國家들이기 때문에 韓國과 여러 面에서 比較하기 어렵다.

(5) 篠原三代平, 『日本經濟의 成長と循環』, 創文社, 1961, p.6. 第1表. 美國, 오스트리아의 數値는, R.W., Goldsmith, "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n Advanced Countries," in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p.115.

〈表 2〉臺灣經濟의 主要指標

(%)

	年平均 經濟成長率	年平均 消費者 物價上昇率	年平均 通貨量 (M <sub>2</sub> ) 增加率	年平均 失業率
1952~56	8.1	10.1	—	4.0
1957~61	7.0	7.7	—	4.0
1962~66	9.9	2.4	21.9	3.6
1967~71	10.6	4.9	21.9	1.9
1972~76	8.9	12.2	28.2	1.6
1977~81	9.0	10.2	22.6	1.4
1982~87	8.2	1.7	24.1	2.5

資料 :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各年度)에서 作成

것이 美國의 4.3%, 그 다음이 오스트리아의 3.7%, 第3位가 日本의 3.6%, 그리고 第4位가 獨逸의 3.0%였다. 一次大戰 및 戰間期(1913~1938)에는 日本의 4.5%가 首位였고, 다른 나라의 年平均 成長率은 모두 2%以下였다. 이와 같이 1860~1941年을 通算한다면, 오늘날의 先進國中에서 가장 빠른 成長을 보인 나라는 日本이었다. 〈表 3〉에서 二次大戰前의 日本의 成長의 자취를 좀 더 자세히 보면, 明治維新 이후 二次大戰까지의 全期間을 통해 오늘날의 韓國이나 臺灣에 比較할 만한 成長率은 보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表 3〉 日本의 明治維新以後 二次大戰까지의 主要經濟指標

	A 大川一司 推計 名目國民 所得 <sup>1)</sup> (百萬圓)	B 都賣物價 指數 (1928~ 32=100)	C (A/B)  (百萬圓)	D C의 增加率  (%)	E B의 增加率  (%)	F 藤野正三郎 推計通貨量 <sup>2)</sup> (廣義) (當年價格 百萬圓)	G F의 增加率  (%)
1878~82	667	41.7	1,600			221.0	
1883~87	607	31.6	1,921	3.80	-5.40	227.0	0.53
1888~92	809	37.1	2,181	2.59	3.26	273.6	3.80
1893~97	1,208	41.7	2,897	5.84	2.36	449.7	10.45
1898~1902	1,978	53.1	3,725	5.16	4.95	797.3	12.14
1903~07	2,522	63.7	3,959	1.23	3.71	1,420.8	12.25
1908~12	2,366	68.5	4,914	4.42	1.64	2,133.8	8.47
1913~17	4,598	81.2	5,663	2.88	3.46	3,384.5	9.66
1918~22	11,385	150.4	7,570	5.98	13.12	9,820.5	23.75
1923~27	12,946	139.6	9,274	4.14	-1.94	12,625.1	5.15
1928~32	12,132	100.0	12,132	5.52	-6.46	14,824.5	3.27
1939~37	16,161	107.4	15,047	4.40	1.44	17,534.2	3.41
1938~42	34,547	184.6	18,715	4.46	11.43	30,788.2	15.15

資料 : 篠原三代平, 『日本經濟의 成長と循環』, 東京 : 創文社, 1967, p. 75, 附表 1, 2에서 作成

註 : 1) Ohkawa and others, *The Growth Rate of The Japanese Economy since 1878*.

2) 藤野正三郎 「1874~1940年의 貨幣量・マーシャル의 Kおよび所得流通速度의 推計」(統計研究會・資本蓄積研究資料(16))

〈表 4〉戰後 日本經濟의 主要指標

年 度	再 建 期		高 度 成 長 期		調 整 期		安 定 成 長 期	
	1946~50	1951~55	1956~60	1961~65	1966~70	1971~75	1976~80	1981~85
經 濟 成 長 率 (%)	9.4	10.9	8.7	9.7	12.2	5.1	5.1	4.4
物 價 上 升 率 (CPI, %)	44.4	6.3	1.5	6.1	5.4	11.5	6.4	2.7
失 業 率 (%)	1.0	1.7	2.0	1.3	1.2	1.4	2.1	2.5
經 常 收 支 (百 萬 \$)	634	524	115	-1,358	6,201	6,912	1,933	252,22
貿 易 收 支	-939	-1,963	468	1,955	13,626	26,990	11,268	35,388

資料 : Yutaka Kosai, *The Era of High-Speed Growth - Notes on the Postwar Japanese Economy*,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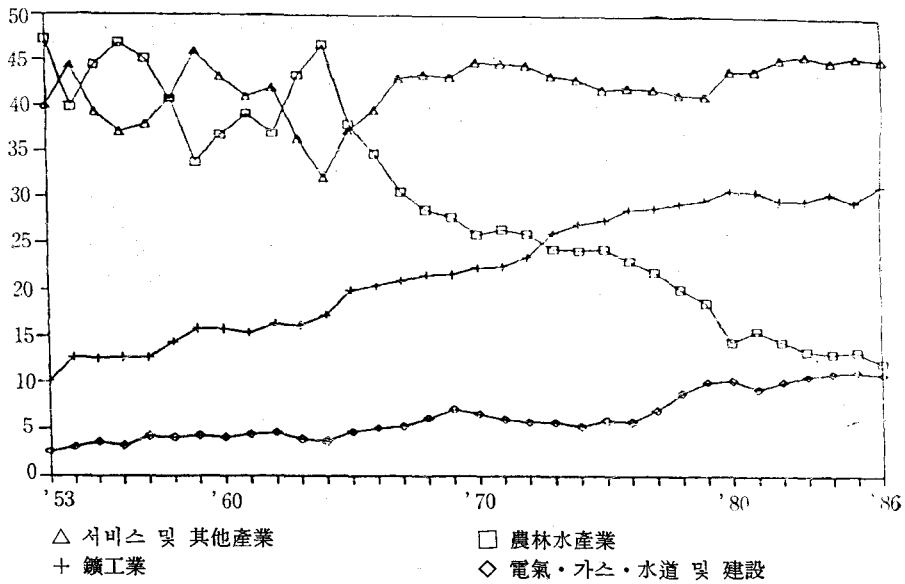
註 : 1) 이 表의 數字들은 모두 國民所得統計로부터 計算한 것임.

日本이 韓國(및 臺灣)과 비슷한 高度成長率을 보인 것은 바로 二次大戰後 1955年~1970年의 期間이었다. 즉 〈表 4〉에서 보듯이 日本은 1945年~1955年의 再建期를 겪은 이후, 1956年의 이른 바 ‘神武勳’을 筆頭로 1970年에 이르기까지 줄곧 年平均 10% 정도의 高度成長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때, 지난 30餘年동안의 韓國의 高度成長은 臺灣과 戰後의 日本을 除外하고는 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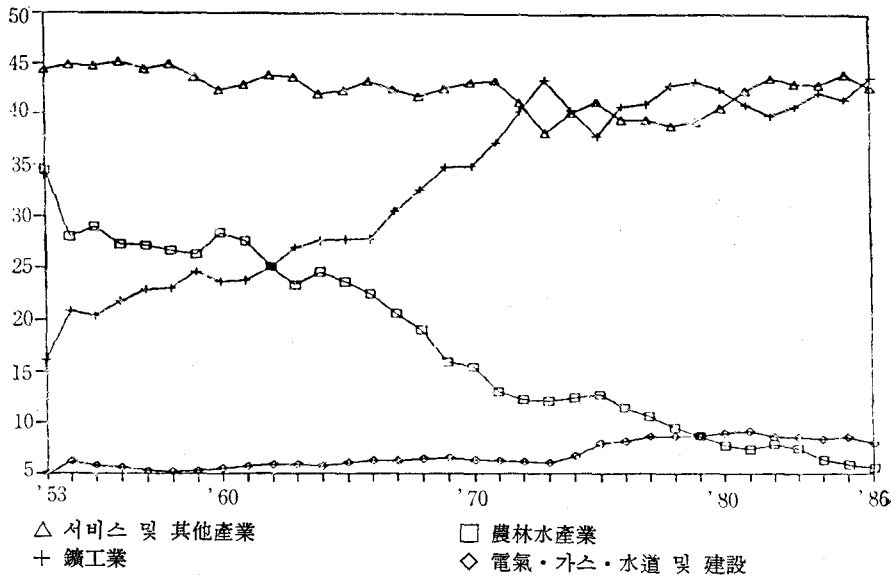
韓國과 臺灣(그리고 日本)의 經濟成長이 거의 같은 期間동안에 그리고 거의 비슷한 速度와 패턴으로 쿠즈네츠의 現代經濟成長을 壓縮된 形態로 나타낸 사실은 偶然한 일일 수는 없다. 基本的으로 이 나라들에 共通하는 要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韓國經濟發展에는 微視의으로 볼 때, 臺灣(및 日本)과 다른 點도 많이 있다. 그 理由는 臺灣(및 日本)에는 없는, 韓國에만 該當하는 要因이 作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 2. 構造變化

三十年에 걸쳐, 世界에서 類例가 드문 높은 成長率을 記錄하는 過程에서 韓國經濟는 農業國으로부터 相當한 工業國으로 轉換했다. 〈그림 1〉은 1953년부터 1986년에 이르는 期間 동안의 産業生産의 構造變化를 나타내는데, 가장 두드러진 變化는 農林水産業 生産額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이 期間동안에 47%(1953年)로부터 13%(1986年) 水準으로 下落한 반면, 鑛工業은 10% 水準으로부터 30%이상으로 上昇하였다는 데 있다. 똑같은 趨勢는 臺灣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臺灣의 경우에는 鑛工業部門의 比重上昇과 農林水産業部門의 下落이 韓國의 경우보다도 더 劇的인 樣相을 띠고 있다(〈그림 2〉). 日本은 終戰當時, 韓國·臺灣과 같은 農業國은 아니었으나, 그 때만 해도 農業에 從事하는 勞動人口가 製造業의 그것보다도 더 많았으며, 經濟構造는 아직 一流 先進工業國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 나라가 先



〈그림 1〉 産業生産의 構成(韓國)



〈그림 2〉 産業生産의 構成(臺灣)

進國의 構造를 갖춘 것은 1955~70年의 高度成長을 겪은 후였다.

一次産業과 二次産業은 서로 有機的인 關係에 있기 때문에 兩部門中의 하나가 먼저 成長하면 그것은 다른 하나의 發展을 牽引하게 된다. 그러나 先進國의 經驗을 보면 兩部門의 發展의 先後關係에 一定한 法則은 없다. 英國의 경우는 農業이 먼저 發展하여 工業의 發展을 牽引했고, 日本의 明治 初期에는 兩部門이 거의 同時에 發達하였는데, 韓國의 경우에는 工業이 먼저 發展하여 그것이 農業部門의 機械化를 促進하고 肥料나 農藥을 供給하는 동시에 農業部門으로부터 勞動을 吸收함으로써 農業의 發展을 促進했다. 臺灣의 경우에는 50年代末 工業部門이 本格的인 發展을 시작하기 前에 農業部門이 상당히 發展하였고 全體的으로 農村經濟가 韓國의 경우보다 充實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高度成長期間동안에 이루어진 工業化過程에서 工業部門自體의 構造도 크게 變化하였다. 60年代에는 주로 外資導入에 의한 施設投資와 半製品導入을 통한 加工을 主軸으로 하는 輕工業分野의 工業化가 이루어졌는데, 輕工業의 育成이 미처 끝나기도 前에 60年代末부터 鐵鋼, 石油化學, 電子 등의 領域에서 重化學工業에 대한 投資가 促進되기 시작하여, '維新' 政變이 있는 72年 이후로는 鐵鋼, 造船, 非鐵, 化學, 機械, 電子 등의 6個分野에 大대의인 投資가 이루어져서, 產業構造가 高度化되었다. 重化學工業의 勃興은 後述한 바와 같은 政府의 強力한 政策에 의하여 支撐된 것인데, 그 基本方向의 妥當性은 且置하고 그 育成過程에서 財閥企業을 集中支援하고, 인플레이를 誘發하고 資源의 浪費를 가져 오는 등의 試行錯誤를 빚었다. 그러나, 그 反面, 당시의 重化學工業中에는 長期的으로는 成功한 것도 적지 않으며, 이것이 後日의 成長과 輸出增加의 基盤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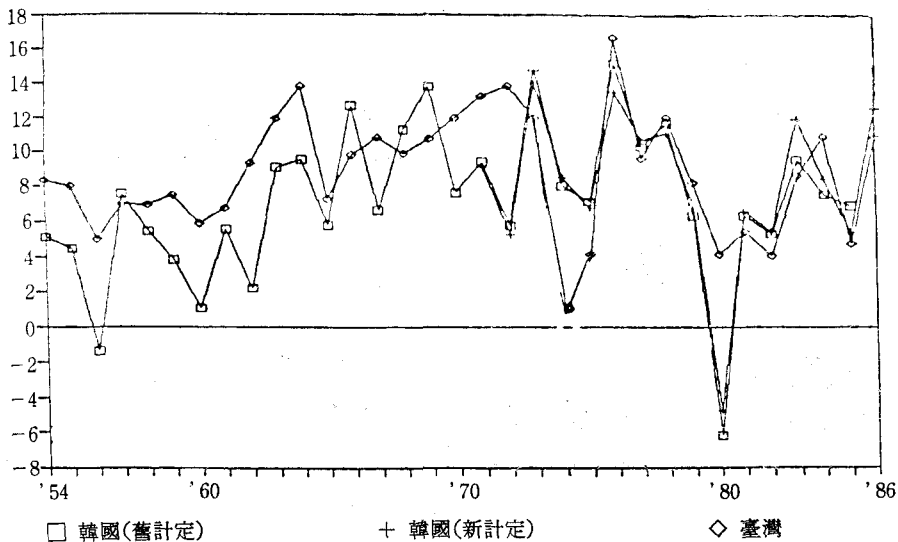
70年代에 일어난 韓國의 重化學工業育成을 위한 產業政策의 原型은 日本이다. 日本의 工業構造의 變化를 보면, 重化學工業은 1955年頃부터 推進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國內需要를 겨냥하였다가 1960年代부터는 이 分野에서의 生産性이 크게 上昇하여 國際競爭力이 向上됨으로써 이 分野는 점차 輸出産業의 主力으로 登場했다. 그리하여 1976년에는 重化學工業製品이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83%에 이르게 되었다. 日本의 重化學工業政策 및 綜合商社를 主軸으로 하는 輸出의 成功을 模倣한 것이 1970年代의 韓國의 重化學工業 育成政策, 그리고 1975年代부터 力點을 두고 推進되기 시작한 綜合商社育成의 政策이었다. 즉, 韓國의 產業構造의 變化는 日本의 그것이 約 15年~20年 時差를 두고 再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重化學工業의 推進의 主體였던 財閥企業도 그 原型은 日本에서 찾을 수 있다. 韓國의 財閥은 部分的으로는 戰後의 日本의 企業그룹과 類似한 面도 있으나, 그 組織과 行動의 樣相은 오히려 戰前의 日本의 財閥企業과 類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韓國보다도 오히려 더 급속한 工業部門의 伸長을 보인 臺灣에 있어서는 民間企業에 의한 重化學工業의 推進은 그리 많지 않다. 電子, 機械등의 部門에는 民間의 輸出企業이 크게 일 어났으나 石油化學, 鐵鋼, 造船 등의 分野에 있어서는 公企業(60年代에 建設된 中國石油化 學工業, 中國鐵鋼, 中國造船 등)에 의하여 擔當되고 있다.

### 3.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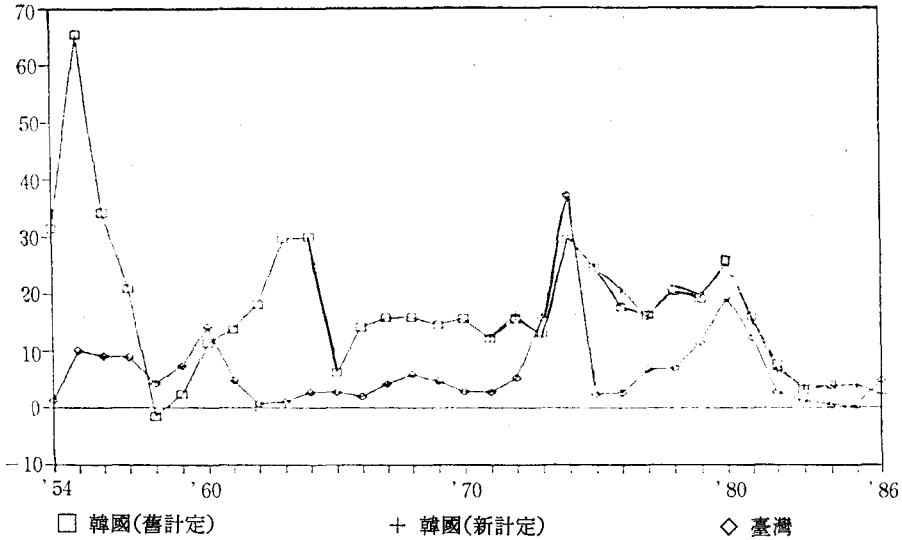
1960年代 및 1970年代의 韓國의 經濟成長의 記錄에서 看過할 수 없는 點은 해마다 成長 率의 起伏이 매우 심했다는 사실이다. 즉 <그림 3>에서 보듯이, 韓國의 成長은 平均적으로 는 高度成長이었으나, 해마다의 成長率은 매우 높은 成長率과 낮은 成長率의 兩極 사이를 分주하게 往來하는 樣相을 보였다. 이에 비해 1955年~1975年 동안에 日本의 成長率은 매우 安定的이며, 臺灣의 그것 역시 <그림 3>에서 보듯이 韓國처럼 起伏이 심하지 않다.

이와 脈絡을 같이하는 現象으로 觀察될 수 있는 것은, 韓國의 經濟成長이 1970年代末까 지는 高率의 物價上昇率에 의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韓國은 第1次 5個年計劃期間 에서부터 第6차 5個年計劃期間에 이르는 每 5個年の 年平均 物價上昇率이 1957~1961年의 期間과 1980年代를 除外하고는 매우 높은 두 자리 數字를 나타냈었다. 이에 비해, 臺灣의 物價上昇率은 石油波動의 期間이었던 1972~76年 및 1979~81年의 기간을 除外하고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安定的이었다. 日本의 경우에도 戰前·戰後를 莫論하고, 戰



<그림 3> 實質 GNP의 成長率





〈그림 4〉 인플레이션率

時나 石油波動의 期間을 除外하면, 인플레가 두 자리 數值로 進行한 例는 없었으며 物價는 大體的으로 安定的이었다. 이와 같이 韓國의 成長은 臺灣이나 日本의 경우와는 달리 해마다 그 振幅이 甚했고, 또 60年代 및 70年代에 있어서는 높은 인플레를 수반하였다.

#### 4. 國際收支 및 投資와 貯蓄

韓國經濟發展의 또 하나의 特徵은 世界에서 類例가 없을 정도로 빠른 輸出 및 輸入의 增加 및 이에 수반하는 對外依存度의 增加이다. 〈表 5〉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第1次計劃期間 동안에 輸出은 무려 年平均 44%로 증가하였고, 第2·3次 5個年計劃期間동안에 도 輸出은 각각 35.3%, 49.6%로 증가하였다. 그 後 輸出額이 增大됨에 따라 그 增加率은 減少하고 있으나, 그 絕對額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輸出의 增加로 말미암아, 經濟

〈表 5〉 輸出 및 輸入의 增加率 및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

	輸 出		輸 入	
	年平均 增加率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	年平均 增加率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
1954 ~ 1956	—	—	—	—
1957 ~ 1961	—	—	—	—
1962 ~ 1966	43.9	7.9	23.2	16.4
1967 ~ 1971	35.3	15.0	26.8	25.0
1972 ~ 1976	49.6	27.8	34.2	34.5
1977 ~ 1981	21.6	32.6	24.1	39.6
1982 ~ 1986	15.1	39.8	8.6	40.5

資料: 〈表 1〉과 같음

의 輸出依存度は 60年代初의 8%未滿으로부터 80年代初에는 40%臺에 이르게 됐다.

輸出의 增加와 아울러 輸入도 해마다 크게 增加하여, 1985년까지는 每年 經常收支의 赤字가 持續되었고, 따라서 經濟의 輸入依存度도 深化되었다. 1985년까지의 經常收支의 赤字는 資本收支의 黑字에 의하여 補填되었는데, 그 結果로 나타나는 外債의 累積으로 1985년에 있어서는 外債는 GNP의 54%에 達하여, 韓國은 그 당시 世界 第4位의 債務國이 되었다.

80年代에 접어든 이후로 徐徐히 改善되고 있던 經常收支는 1985년이후로 石油價格의 下落으로 因한 輸入의 減少 및 日本 圓貨의 大幅切上이 몰고온 歐美市場에 있어서의 韓國 輸出商品의 競爭力 改善으로 因한 輸出의 增加로, 一擧에 赤字로부터 大幅의인 黑字로 反轉하여, 經常收支의 黑字幅은 1985년에 60억弗, 1987년에 100억弗에 達했고, 1988년에는 元貨의 上昇, 賃金의 上昇 등에도 不拘하고, 黑字幅은 120억弗에 達할 것이 豫想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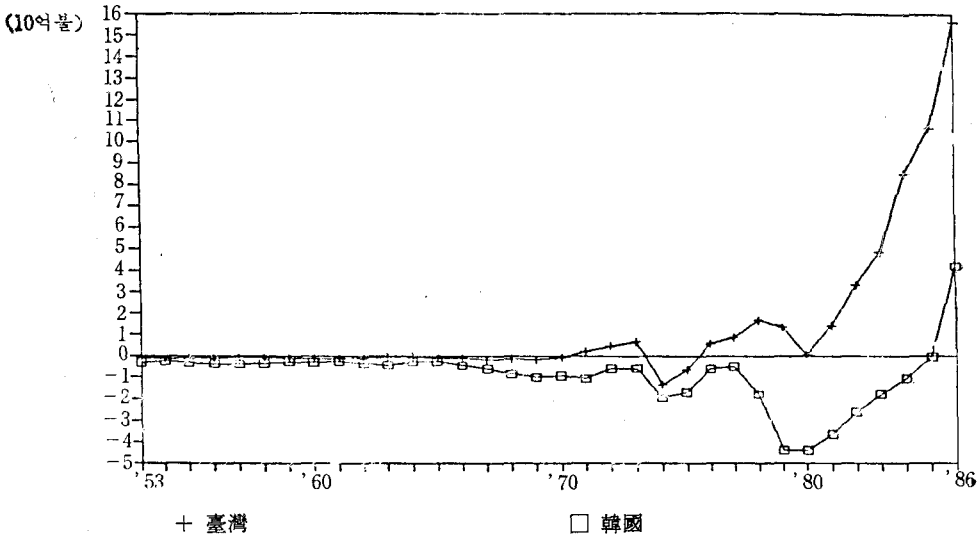
韓國보다도 貿易依存度가 더 높은 나라가 臺灣이다. 臺灣은 輸出促進을 위한 各種 政策을 韓國보다도 앞서서 實施한 나라이며, 1950年代부터 工產物(및 農產物)의 輸出이 크게 增加하였고, 이에 따라 輸入도 크게 增加하여, 輸出 및 輸入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最近에 와서는 각각 56%, 43%에 達하게 되었다(〈表 6〉). 臺灣은 〈그림 5〉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71년부터는 貿易收支의 黑字를 나타내고 있다.

日本의 貿易依存度は 臺灣이나 韓國에 比하여 比較가 안될 정도로 적다. 즉 輸出/GNP의 比率은 1986年の 경우 約 10%, 輸入/GNP의 比率은 約 7%에 不過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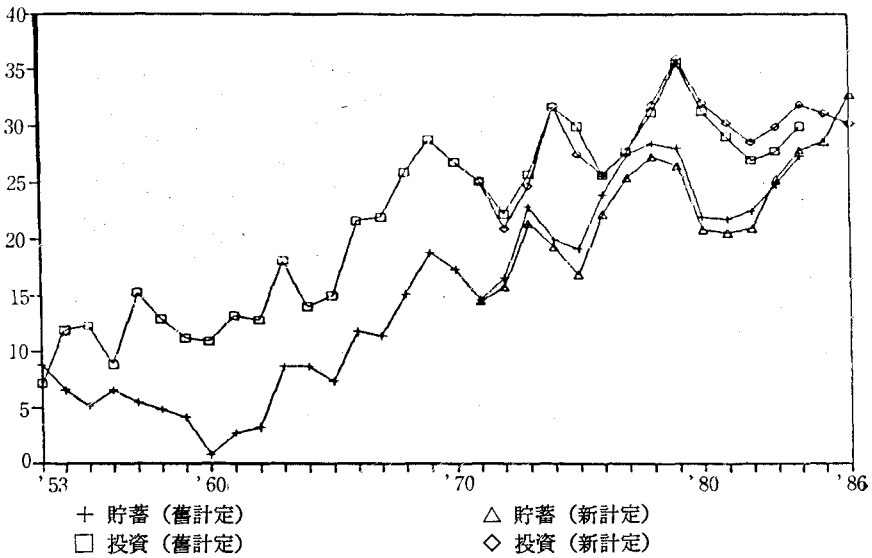
國際收支의 不均衡은 國內에 있어서의 貯蓄과 投資의 不均衡에 의하여 反映된다. 韓國의 投資率은 〈그림 6〉이 보여주듯이, 1950年代 이후로 1985년에 이르기까지 貯蓄率을 크게 上廻하였다. 貯蓄率은 50年代에 있어서는 극히 낮았으나, 60年代, 70年代가 進行되는 동안에

〈表 6〉 臺灣의 輸出, 輸入의 增加率 및 貿易依存度の 推移

	輸 出		輸 入	
	年平均 增加率 (%)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 (%)	年平均 增加率 (%)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 (%)
1952 ~ 56	23.3	8.1	19.1	14.3
1957 ~ 61	22.7	11.5	22.8	18.4
1962 ~ 66	23.5	18.1	14.7	19.8
1967 ~ 71	31.2	27.3	24.5	27.9
1972 ~ 76	32.2	43.9	35.2	43.3
1977 ~ 81	21.9	52.0	22.9	49.4
1982 ~ 86	17.6	55.9	11.2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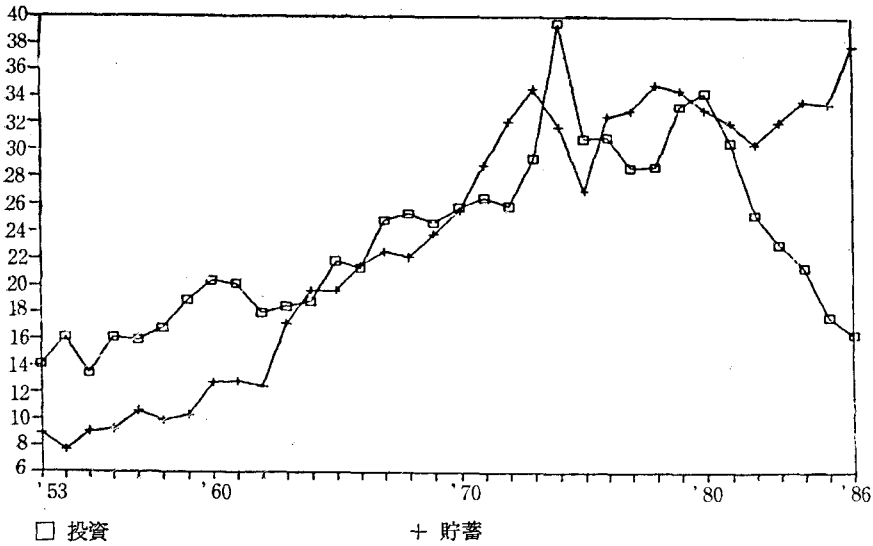
〈그림 5〉 貿易收支



〈그림 6〉 投資와 貯蓄(韓國)

크게 增加하여 마침내 1986年 이후에 있어서는 貯蓄이 投資를 凌駕하게 되었다. 國際收支의 黑字基調가 定着되었다고 하는 것은 貯蓄率이 投資率을 凌駕하는 不均衡基調가 定着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臺灣과 日本은 韓國 이상으로 貯蓄이 投資를 凌駕하는 不均衡構造를 가지고 있다. 臺灣도 1960年代末까지는 貯蓄이 投資에 비해 크게 不足하였으나, 1970년부터는 石油波動의 期



〈그림 7〉 投資와 貯蓄(臺灣)

間을 除外하고는 貯蓄이 投資를 超過하고 있어, 國際收支面에 있어서의 輸出超過가 國內에 있어서의 貯蓄超過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刮目할 만한 것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에 있어서는 貯蓄率은 38%에 達했는데 投資率은 18%에 不過해서, 貯蓄率 超過는 GNP의 무려 20%에 達하는 不均衡樣相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 III. 壓縮成長의 要因

韓國과 臺灣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長期間에 걸친 先進國의 發展을 短時日內에 壓縮한 發展을 이룩했다. 日本은 그 發展段階가 韓國·臺灣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1955年~1970年의 發展에는 보다 先進的인 美國의 發展을 短期日內에 壓縮한 一面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日本의 發展過程과 韓國·臺灣의 發展過程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類似性이 있다. 이러한 類似點의 出現은 偶然일 수는 없고 분명히 類似한 發展要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反面, 三國의 發展의 相異點은 분명히 發展要因上의 差異에 起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三國에 共通하는 發展要因은 무엇이겠는가.

韓國과 臺灣(및 日本)의 發展要因에 대해서는 많은 論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言及한다는 것은 蛇足으로 여겨질런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轉換點에 서서, 다시 이 나라들의 壓縮成長의 要因을 특히 ‘壓縮’이라는 修飾接頭語에 力點을 두면서 考慮해

보자.

韓國의 成長要因으로는 對內的으로 (1) 資源의 賦存이 빈약하고 人口가 많아서, 그 住民이 옛날부터 勤勉, 節約, 忍耐를 尊重하는 生活習性을 體得하여, 이것이 難局을 克服해내는 데 있어서 ‘살아남고자 하는 性癖’(survival trait)으로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點, 그리고 (2) 教育을 통한 向上이 可能하다는 思想의 傳統을 傳受받아, 經濟水準이 비슷한 다른 文化圈의 나라에 比해 人的 資源의 開發을 위한 投資를 比較적 많이 해왔다는 點, 그리고 (3) 三國의 政府가 다 나름대로의 ‘開發指向型’ 政策을 써서 經濟發展을 國家의 모든 政策의 首位에 두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對外的으로는 (4) 資源이 貧弱하고 剩餘勞動力을 가진 韓·日·臺와 같은 나라의 工業化 努力을 가로 막을 수 있는 需要와 供給面에 있어서의 制約을 二次大戰 이후 오늘에 이르는 國際經濟의 秩序가 實質的으로 解除해 줌으로써, 거센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이 論한 바와 같은 後發國의 利點을 十分 活用할 수 있게 하였다는 點을 들 수 있다. 以下에서 이에 대하여 敷衍해 보자.

(1) 韓國人이나 臺灣人, 그리고 日本人이 그 自然的 條件 때문에 ‘살아남고자 하는 강한 性癖’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性癖은 三國人의 獨占物이 아님은 分明하다. 人間인 이상 이 性癖은 어디에 있어서나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록 先天的으로 人間은 다 平等한 生存의 性癖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三國에 있어서와 같이 資源이 貧弱하고 人口가 稠密한 경우에는 依存할 資源이 稀少하기 때문에, 오히려 可用資源의 效率的인 利用·開發을 위한 後天的 性向이 연마되어 이것이 특히 產業化社會의 時代에 필요한 物慾, 向上心, 競爭心 등을 鼓吹하고, 루이스(W. A. Lewis)教授가 強調한 “經濟하려는 意志”(the will to economize)를 強化한다는 點을 지적하고자 한다.

(2)는 三國의 住民의 文化的 背景을 記述하는 것으로, 이들이 傳授한 文化의 性格이 高度로 現世的이고, 人間은 教育을 통하여 改善될 수 있다는 價值觀에 立脚하여 教育을 중요시 하였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傳統的인 觀念이나 價值觀은 商工業을 포함하는 經濟活動을 賤視하고 實事求是의 정신이 不足하여, 이것이 產業發展에 障礙가 된다는 說이 있다. 이 說에는 一理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產業革命이전의 모든 社會의 價值觀이나 觀念은 모두 反產業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西洋의 傳統觀念도 例外가 될 수 없다. 要는 ‘壓縮成長의 要因’이라는 視角으로 볼 때, 이러한 傳統觀念이 產業化에 適應하고 그것을 能動的으로 推進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東洋 三國의 傳統觀念은 비록 產業化를 自體的으로 創始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本質은

人間의 合理的 思考를 尙상하고, 現世에서의 成就를 통해 宿命의 桎梏을 거부하는 價値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能動的으로 産業化에 適應하고 그것을 推進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의 教育의 發展을 보면 初等教育은 日政末期부터 實施되어 文盲의 退治에 기여했으며, 中等教育과 高等教育은 50年代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擴張되어 世界銀行의 統計에 의하면 1984年 現在 韓國人의 教育水準은 量的인 面에 있어서는 西歐의 先進國水準에 到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經濟發展, 특히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단순한 資源의 賦存, 文化的 傳統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達成하기 위해 能動的으로 資源을 새로이 結合·利用하는 發展指向的인 이노베이터들의 役割을 통하여 비로소 可能하다.<sup>(6)</sup> 특히 後進國의 壓縮成長의 경우에는 그 이노베이터들中에서 政府라는 經濟主體를 들 수 있다. 존슨(Chalmers Johnson)교수는 그의 『通産省과 日本의 奇蹟』(*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1982)에서 日本을 “發展指向型 國家”(developmental state)라고 指摘하였는데, 이 表現은 日本뿐 아니라, 韓國이나 臺灣에도 그대로 通用될 수 있다. 西歐 先進國에 있어서는 經濟發展의 主役이 民間企業들이며 이 나라들에 있어서의 政府의 役割은 民間經濟活動을 規制<sup>(7)</sup>하는데 反해, 日本에 있어서의 政府의 役割은 國民經濟의 發展을 主導하고 計劃的으로 開發을 促進하는 데 있다는 것이 그의 論旨였다. 그는 韓國經濟의 體制를 南美諸國의 그것과 類似한 權威主義的 資本主義(authoritarian capitalism)이라고 特徵지었으나, 이 表現의 妥當性은 且置하고 1960年代 이후의 韓國의 政府役割은 日本의 그것에 못지 않는 鮮명한 開發指向型이었다는 것만은 否認할 수 없다.

1960年代 이래로, 韓國政府는 ‘經濟第一主義’를 標榜하면서 經濟成長을 모든 國家政策의 首位에 두고 그것을 阻害하는 모든 要因의 作用을 除去 내지 抑壓하였다. 1962年 이래로 韓國政府가 採擇한 經濟開發計劃은 自由世界 어디에도 볼 수 없는 強力한 實行計劃이었으며, 그 主要內容의 實現을 위하여 自由國家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強力한 中央集權의 政府가 價格機構, 非價格機構(統制) 및 ‘道義의 說得’(moral suasion)을 自由로이 動員하여 資源을 恣意로 驅使하였다. 韓國政府가 採擇한 産業政策은 그것의 原型이 日本에서 推進된 것보다 훨씬 더 強力한 手段으로 推進되었다.

여기서 우선 한 가지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政府의 強制없이 韓國의 經濟發展

(6) 이것은 슈페터의 經濟發展論의 基本視角과 符合한다.

(7) 존슨은 이러한 나라를 “規制指向的 國家”(regulatory state)라고 불렀다.

이 不可能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政府의 恣意的이고 強制的인 成長推進政策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많은 成長阻害要因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政府의 發展指向的 努力이 특히 發展의 初期에 있어 그 始動을 걸게 된 것은 否認할 수 없다.

臺灣의 政府도 뚜렷한 ‘發展指向型 國家’의 役割을 수행해 왔다. 비록 그 經濟發展의 目標과 그 政策의 遂行方法은 韓國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으나, 그 나라도 一種의 ‘經濟第一主義’에 의해 統治되어 왔으며, 이것이 臺灣의 發展에 寄與했다. 日本도 吉田首相 以來로 그 特有的 組織과 官民間의 關係를 통해, 가장 徹底한 ‘發展指向型 國家’의 政策이 推進되어 왔다. 그것이 日本의 奇蹟을 낳은 것이다.

(4) 韓國의 經濟發展을 위해 對內的 要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對外的 要因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壓縮成長의 必要條件中의 하나이다. 지난 40餘年동안의 國際關係가 韓國이나 臺灣(그리고 日本)과 같은 나라의 發展의 供給·需要 兩面에서의 隘路條件을 除去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關係의 展開가 없었다면, 아무리 위에서 말한 對內的 要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韓·臺·日의 成長과 같은 高度成長은 이룩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國이나 臺灣같은 나라가 餘他的 世界와의 交接이 杜絶된 채 獨自的으로 發展을 試圖할 경우, 供給·需要 兩面에서 克服하기 어려운 隘路條件에 봉착하게 된다. 오늘날 東歐圈의 어떤 閉鎖된 勞動過剩國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經濟가 發展하기 위하여 供給面에 있어서의 隘路條件은 資本의 不足, 資源의 不足 및 技術의 低位라 하겠으며, 需要面에서의 隘路條件은 市場의 狹小이다. 이 나라가 資本의 不足을 解消하기 위하여는 오랜 期間에 걸친 貯蓄에 의하여 自力으로 資本을 蓄積해야 하고, 技術의 低位를 克服하기 위하여는 長期間에 걸친 技術의 習得과 修練으로 그것을 터득하고 익혀야 하며, 資源의 缺乏을 克服하기 위하여는 이 나라의 剩餘生産物을 輸出함으로써 外資를 획득하여야 한다. 資源의 不足을 補填하기 위하여는 不足한 國內의 一次產品을 輸出해야 한다. 이 모든 隘路條件의 克服이 맬더스의 法則의 追擊을 물리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물리치고 工業化의 離陸段階에 進入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2次大戰後의 後進國의 경우에는 自體努力의 긴 過程을 省略한 채, 離陸段階에 進入할 수 있게 되었다. 貯蓄의 不足은 外資導入으로 充當할 수 있었고 技術의 低位는 技術導入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資源도 低廉한 價格으로 購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供給面의 隘路條件은 無難히 克服할 수 있게 되었다.

閉鎖經濟下의 開通國의 工業化에는 需要面으로부터의 隘路條件도 크다. 工産物의 生産은 主로 國內의 需要에 依存해야 하고 通信과 輸送이 어렵기 때문에 遠隔한 地方과의 交易은

힘들었다. 工業化가 國內市場에 依存하는 한, 그것이 狹小한 國內市場에 의하여 制約을 받는 것은 當然하다. 初期의 資本主義의 發達이 모두 國內市場이 큰 나라나, 아니면 世界的인 海運國이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先進諸國에 있어서의 大量消費社會의 出現이 自由貿易을 通하여 後進國의 勞動集約的 工業生産物에 대한 彈力的인 市場을 提供하고 있다.

韓國과 臺灣은 1960年代 이래로, 先進國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고, 先進國으로부터 調達한 原資財를 加工하여 그것을 다시 先進國에 輸出함으로써 發展의 실마리를 잡았다. 韓國과 臺灣은 資本과 技術을 日本과 美國(특히 日本)으로부터 導入함으로써 供給面의 隘路를 克服하고, 그 製品을 歐美諸國(특히 美國)에 輸出함으로써 需要面에서의 制約條件을 克服했다. 兩國이 日本과 隣接해 있다고 하는 것은 供給面의 隘路를 克服하는 데 決定的으로 有利했고, 美國의 市場이 손쉽게 接近될 수 있었다는 것은 需要面에서의 隘路條件의 克服에 매우 有利한 條件을 提供했다. 이렇게 볼 때 韓國과 臺灣의 壓縮成長은 크게는 二次大戰後의 國際經濟秩序의 產物이며, 작게는 美國과 日本을 主軸으로 하는 太平洋經濟의 展開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日本은 물론 韓國 및 臺灣과 다르다. 韓國 및 臺灣은 資本 및 技術을 一方的으로 先進國에 依存함으로써 壓縮成長을 이룩했지만, 日本의 高度成長은 自體의 努力에 依存한 程度가 보다 컸다. 그러나 高度成長期의 日本은 적어도 한 가지 面에서는 韓·臺와 類似한 面이 있다. 즉 日本은 二次大戰前까지 긴 發展의 歷史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1940年代初부터 1950年代 中葉까지 日本의 産業은 技術發展의 空白期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先進國, 특히 美國과의 技術의 격차는 相當히 컸다. 日本이 이 격차를 메우고자 많은 自體 努力을 傾注한 것은 否認할 수 없으나, 그 高度成長을 뒷받침한 技術은 거의 모두 美國에 의해 開發된 것이었으며, 日本은 그것을 비교적 손쉽게 導入·模倣할 수 있었다는 點에 있어서 韓·臺의 경우와 어느 정도의 共通點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日本의 1955~1970年の 高度成長도 역시 一種의 壓縮過程이었다. 壓縮過程이 아니고는 年平均 10%의 成長이 長期間에 걸쳐 지속될 수가 없다.

壓縮成長은 처음에는 內需市場을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內需市場에 依存하는 壓縮成長은 곧 그 限界를 드러낸다(南美的 新生工業國의 例가 이것이다). 그것은 멀지 않아 輸出市場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狹小한 國內市場을 가지고는 도저히 壓縮된 힘으로 增加하는 生産物을 消化할 수 없기 때문이다. 導入된 資本과 技術로 設立되는 生産施設에서 組立·加工을 하기 위한 大量生産體制로 特徵지을 수 있는 壓縮成長은 國內市場만 가



지고는 支撐할 수가 없는 一種의 外延的 成長이며, 그것은 本質的으로 輸出依存的일 수 밖에 없는 特殊한 發展類型이다. 따라서 그것은 결국 輸出超過, 즉 貿易收支의 黑字를 수반한다. 가장 劇的인 例가 臺灣이라 하겠다. 韓國이 臺灣보다 經常收支의 黑字의 實現이 10년이상 遲延된 理由は 주로 韓國이 70年代初부터 重化學工業의 設立을 위하여 大量投資를 敢行한 데 있다. 더구나 그 大量投資의 상당부분이 不實化하여 浪費로 돌아갔기 때문에 黑字의 示顯이 늦어진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나타내자면 壓縮成長過程에는 所得이 急速히 增加하는데, 所得의 增加에 따라 平均消費性向이 현저하게 減少함으로써 貯蓄超過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壓縮成長이란, 本質的으로 經常收支의 黑字 및 投資率에 대한 貯蓄率의 超過를 수반하는 不均衡成長이라 할 수 있다.

#### IV. 壓縮成長과 不均衡構造

韓國經濟는 臺灣(그리고 日本)經濟와 같이 先進國의 長期間에 걸친 發展을 短期間에 壓縮하는 發展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壓縮成長過程에서 韓國經濟는 臺灣經濟나 日本經濟와 다른 많은 構造의 特徵을 지니게 되었다. 韓國經濟의 構造의 特徵을 만들어 낸 要因은 間接的으로는 第3節에서 論한 (1), (2)의 要因(즉 自然的 條件 및 文化的 背景 등)에도 內在하지만, 가장 直接的으로는 (3)의 要因(즉 發展指向的인 政府)에 있다고 생각된다. 以下에는 韓國經濟의 構造의 特徵을, 그것을 만들어 낸 60年代 및 70年代의 政策에 관련시키면서 論하고자 한다. 1962年 이후 1981년까지의 4次에 걸친 5個年計劃 文書를 보면 政府가 標榜한 궁극적 目標은 '自立經濟의 達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政府가 採擇한 方法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 項目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1) 國民經濟의 總力을 經濟開發에 投入한다. 經濟開發은 工業化를 통하여 이룬다. 工業化는 처음에는 輕工業을 中心으로 推進하되, 점차 重化學工業을 設立함으로써 그 構造를 高度化한다.

(2) 經濟發展은 強力한 政府의 統制와 指導下에서 이루어진다. 政府의 政策은 5個年計劃을 통하여 闡明한다. 每經濟計劃에는 政府投·融資에 의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民間經濟의 主要目標을 提示한다.

(3) 企業은 原則的으로 民有·民營으로 하되, 重要 投資에 관한 意思決定에 있어서는 政府가 企業의 意思를 代替내지 補完하고, 그 運營에 幅넓게 介入한다. 基幹產業(주로 重化學工業)은 주로 大企業에 대한 支援을 통하여 建設한다.

(4) 經濟發展에 필요한 投資를 하기 위하여 外資를 과감히 도입한다. 外資導入으로 인한 外債를 償還하고 雇傭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經濟政策의 最大力點을 輸出增加에 둔다.

(5) 모든 政策은 成長을 優先하고 富와 所得의 分配, 産業間・地域間的 均衡成長은 副次的인 目標로 한다. 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甘受한다.

이상의 基本戰略은 물론 每 5個年計劃 文書에 그대로 提示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計劃 文書에는 上記와는 反對의 것을 羅列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60年代와 70年代의 政策의 基本方向을 보면, 그 基調는 대체로 이상의 5個項目과 같은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本稿의 第2節에서 論한 韓國과 日本 및 臺灣과의 差異點의 大部分은 이 5個項의 戰略의 推進過程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敷衍 說明한다.

(1) 1960年代 이후 韓國政府는 當時의 國民의 興望이 非生産的인 政爭에 終止符를 찍고 經濟發展을 위한 政策을 推進하는 데 있다는 것을 看破하고, 執權 直後부터 一種의 내셔널 리즘에 立脚한 여러가지 改革과 開發政策을 推進했다. 그러나 執權 直後에 채택한 大部分의 政策은 試行錯誤로 돌아가고 인플레이와 外換의 枯渴을 초래했다. 初期의 失敗를 機敏하게 感知한 政府는 보다 現實的인 政策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1963年頃부터 外資導入, 換率의 調整, 稅制의 改革 및 利子率의 引上 등의 現實化政策을 採擇하여, 工產品의 輸出을 통한 輸出主導開發政策의 기초를 마련했다. (輸出政策에 關해서는 後述 參照).

政府는 여러 번의 5個年計劃을 통하여, ‘重農政策’ 또는 ‘農工併進政策’ 등의 口號를 내 걸면서 再三 農業에 대해서도 應分의 開發力點을 둔다는 것을 闡明했다. 그러나 農業에 대한 投・融資의 實績値는 항상 計劃値에 未達했으며, 1963年까지는 50年代 以來의 低米價政策이 그대로 踏襲되어 農業은 工業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政策上의 配慮를 받지 못했다. 1969年에 이르러 ‘高米價政策’이 추진되었으나, 그것은 農業開發을 위한 劃期的인 政策方向의 轉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政府는 또 1970年부터 ‘새마을運動’을 추진함으로써, 重農으로의 政策轉換을 하는 것 같은 印象을 주었다. 그러나 이 運動은 精神刷新을 통한 農業의 增產運動 내지 所得增大運動이었으며, 體系的으로 農業에 대한 政策的 支援을 加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韓國의 農業政策의 特徵은 그 重要性이 經濟計劃의 主務當局에 의해 제대로 認定받지 못한 데 있다. 經濟政策當局은 農業의 發展可能性은 심히 制限되어 있다고 보고, 처음부터 그것을 重點事業으로 看做하지 않았다. ‘壓縮成長’을 指向하는 立場에서 보면, 農業이 眼中에 들어오기 힘든 것은 當然했다. 農業에 관한 政策은 餘他的 國民濟經와 관련된 一部로서 經濟企劃當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特殊産業部門으로서 農林(또는 農水産)부에 의해

立案・推進되었다. 農業政策은 주로 國民經濟에 대한 食糧供給의 生産的 視角에서 구상되었으며 農業과 非農業部門과의 有機的 關係를 포함하는 農民生活의 經濟的 視角이나 村落共同體의 意義에 관한 社會的 視角에서 구상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農水産部の 政策의 力點은 주로 農産物의 増産을 위한 技術上의 支援이나 指導에 시중했고, 그 増産이 農村經濟에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經濟的 고려는 적었다. 農民은 그들 스스로의 自救努力과 農水産部(및 農協)에 의한 努力에 힘입어 農業의 生産性 增加에 힘쓴 結果, 현재 韓國農業의 生産性은 日本에 比肩할 만한 水準에 도달하게 됐다. 그러나, 農村經濟는 疲弊하고 農村社會는 瓦解되고 있다. 여기에 韓國의 農業問題의 基本이 있다. 그러나 이 問題에 대해 여기서 詳論하지는 않는다.

韓國의 工業化政策은 後述하는 바와 같은 強力한 政府에 의해 推進되었는데, 그 基本方向은 政府가 社會間接資本의 投資를 담당하고, 民間企業의 育成을 통하여 工業化를 추진하되, 처음에는 輕工業分野에 있어서의 輸出과 輸入代替를 設立하였다가 이 分野의 成熟과 同時에 重化學分野의 輸出과 輸入代替産業으로 進入하도록 하였다.

(2) 經濟開發을 위해 그 初期에 政府가 先導役割을 담당하는 事例는 많은 後進國에서 共同的으로 볼 수 있다. 그 理由는 近代의 企業家들이 質量 兩面에서 不足하고, 그들의 危險負擔能力과 資金動員能力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이다. 韓國에 있어서도 例外가 아니어서 政府는 工業化의 推進을 위해 先導의 役割을 담당했다.

우선, 韓國에 있어 ‘政府’란 무엇이나에 관한 考察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韓國政府의 權威는 西歐諸國의 그것은 물론 臺灣・日本의 그것과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60年代 및 70年代의 韓國의 中央政府는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中央政府였다. 그것은 朝鮮王朝時代의 政府의 權威, 日本時代 政府의 統制力, 그리고 第一共和國 政府의 專制性을 具備한 莫強한 政府로서, 그 影響力은 超法的인 幅과 深度를 가지고 있었다. 그 中央集權의 性格을 비교적 잘 표현하는 概念으로서는 Alexis de Tocqueville의 이른바 “統治의 中央集權”(centralization in government)과 “行政의 中央集權”(centralization in administration)의 概念이 있다.<sup>(8)</sup> 前者는 國家全般에 걸친 問題(例를 들어, 國民全體에 해당되는 法規의 制定이나 對外關係의 設立 등)가 中央政府에 委任되어 있는 경우이고, 後者는 國家의 一部分(例를 들어 一部 地方이나 利益集團)에 관한 意思決定權이 中央政府에 委任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Tocqueville에 의하면 國家가 存續하기 위하여서는 統治의 中央集權은 필요하지만, 行政의 中央集權은 有害無益한 것이니, 그것이 過度하면 國民의 地方精神(local spirit)을 萎

(8)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1835. 第1卷, 第5章 末尾 參照.

縮시키고 결국 그 國民의 精神을 萎縮시킨다는 것이다. 韓國의 政府는 이 두 개의 形態의 中央集權을 가장 幅넓게 가지고 있는 例에 屬한다.

60年代 및 70年代의 經濟運營에 대한 韓國政府의 役割을 論하기 위해 ‘中央政府’를 最高位의 ‘權力엘리트’(power elite)와 그 밑의 ‘技術官僚層’(technocrats-bureaucrats)으로 나누는 것이 便利할 것이다. 前者는 文字 그대로 最高統治者와 그 幕僚들(例를 들어 1976년에 靑瓦臺에 設置된 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 企劃團)이며, 後者는 前者의 命令이나 意思決定을 이어받아 그것을 執行하는 官僚를 말한다. 이 兩者가 위에서 말한 “統治의 中央集權”과 “行政의 中央集權”을 分割—그 分割線의 區劃은 흔히 恣意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하여 行使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列擧한 5項目에 걸친 開發戰略의 定立은 주로 最高位엘리트에 의해 決定되었고, 그 戰略에 立脚한 政策手段은 주로 經濟計劃機構를 頂點으로 하는 中央政府의 技術官僚層에 의해 決定·執行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中央集權은 어디에 있어서나 그 自體의 다이내미즘이 있다.

技術官僚層은 權力엘리트의 意圖를 事전에 窺知하여 先制執行하는 버릇을 가지기 때문에 60年代 이후 韓國의 中央政府의 影響力은 날이 갈수록 擴大되었다. 1972년의 ‘維新政府’ 수립 이후로는 權力엘리트가 經濟의 壓縮成長을 政權의 正統性을 확립하는 手段으로 간주하게 되자, 經濟에 대한 中央政府의 統制도 時間의 經過에 따라 強化되어 끝내는 國民經濟의 구석구석에 散在하는 모든 公私의 機能(이를테면 信用, 金融, 通商, 外資導入, 勞動, 民間經濟團體 및 企業運營 등에 관한 大小의 機能)이 技術官僚層을 經由하여 權力엘리트의 手中에 吸收되었다.

“統治의 中央集權”과 “行政의 中央集權”이 韓國在來의 官尊民卑의 觀念과 結合되어 經濟運營에 적용된 結果, 韓國經濟는 日本이나 臺灣 등에 볼 수 없는 몇 가지 特徵을 지니게 되었다. 日本이나 臺灣도 모두 ‘發展指向型國家’이지만 거기에는 統治의 中央集權은 있되, 行政의 中央集權은 韓國에 비해 훨씬 弱한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두 개의 中央集權이 合쳐진 結果로 모든 公私의 機關이 당연히 가져야 할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게 되었다. 例를 들어 金融機關은 金融에 관한 意思決定을 할 수 없게 되었고, 勞動組合은 組合으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企業도 企業運營에 있어서의 自律性이 自意 또는 他意에 의해 制限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같은 政府機關에 있어서도 下部機關은 그 本然의 權能을 喪失하고 당연히 해야 할 意思決定을 上部에 自進해서 委任하는 慣行이 定着하게 되었다.

開發의 初期에는 強力한 中央集權政府의 強制力이 發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가 있다. Tocqueville도 이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中央集權이 지나칠 경우, 그 意思決定基準의 缺如내지 不合理성은 막을 길이 없고, 그것은 資源의 使用에 많은 浪費를 가져온다.

같은 開發指向型 國家이면서도 日本이나 臺灣에서 볼 수 없는 不條理(金融의 不條理, 勞使關係의 不條理, 企業의 不實化 및 그 處理過程의 不條理 등)가 유독 韓國에만 많은 理由는 韓國에서의 中央集權의 程度가 특히 지나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韓國政府는 주로 財閥이라고 불리는 大企業集團을 育成함으로써 工業化를 成就하고자 하였다. ‘壓縮成長’을 指向하는 韓國政府는 ‘衡平’에 관해서는 원래 政策의인 配慮를 하지 않았으나, 주로 輕工業産業을 育成한 1960年代에 있어서는 財閥育成은 오늘날에 있어서 처럼 두드러진 現象은 아니었다. 그러나 1972년에 維新政府가 수립되면서 당시의 權力엘리트는 對外的으로는 南北會談의 추진으로 ‘統一’을 標榜하며, 對內的으로는 輸出目標의 달성 및 重化學工業 建設을 통한 ‘壓縮成長’을 加速化함으로써 維新政權의 正統性을 補填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戰後의 日本式인 industrial targeting을 통한 財閥企業의 育成이 本格化되었다. 元來 industrial targeting은 日本의 通產省이 所得彈力性과 技術進步의 可能性이 높은 産業을 集中開發하기 위하여 1950年代의 高度成長期에 採擇한 政策인데, 1960年代 後半부터 韓國도 이 政策을 대체로 그대로 模倣했다. 그리하여 1967년에 「機械工業育成法」과 「造船工業育成法」이, 1969년에 「電子工業育成法」이, 1970년에 「鐵鋼工業育成法」이 制定되어 이들 産業의 重點開發에 착수하게 되었다. 政府는 또 輸出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日本의 綜合商社를 模倣한 綜合商社를 設立하여, 이들에게 輸出目標을 割當함으로써 輸出目標을 達成하는 데 寄與하도록 했다.

大企業集團 育成政策은 韓國의 大企業을 短時日內에 世界有數의 企業集團으로 成長시키는 데 成功했다. 大企業集團이 國民經濟에서 어떤 地位를 차지하는가를 考察하는 데에는 두 가지 側面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어떤 大企業集團이 어떤 特定市場에 대한 市場占有率(market share)이 얼마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大企業集團(예를 들어 X財閥)이나 또는 特定階層의 大企業集團(예를 들어 上位 5大財閥그룹)이 國民經濟의 特定分野(예를 들어 製造業分野)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얼마나 되느냐의 側面이다. 예를 들어 上位 5大財閥그룹의 生産額이 製造業分野의 全企業의 生産額의 몇 %를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이것이다. 이것은 어떤 特定市場의 支配力의 문제가 아니라, 全體市場의 支配力 및 國民經濟全體에 대한 支配力의 문제이다. 韓國에 있어서의 財閥의 經濟支配力은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臺灣이나 日本에 있어서 보다 훨씬 크다. 前者 즉, 獨寡占의 정도에 관한 研究는 극

히 稀少하지만, 그 동안 發表된 몇 가지 研究結果를 보면, 韓國의 獨寡占은 日本, 臺灣보다 훨씬 두드러지며, 또 1982년까지는 적어도 그 傾向이 強化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9)</sup> 後者 즉, 大企業集團의 經濟支配力에 관한 研究도 매우 稀少하나, 比較的 保守的이라고 보이는 研究結果<sup>(10)</sup>를 보아도 韓國의 大企業集團이 國民經濟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世界銀行의 資料를 보아도 이것이 臺灣이나 日本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있다. 韓國의 四大財閥企業中에서 가장 작은 것도 臺灣의 最上位 10大企業을 合計한 것보다 크다.<sup>(11)</sup> *Fortune*誌에 의하면 韓國의 大企業集團中의 9個는 世界 500大企業體에 屬하며, 그 中 8個는 모든 開途國의 私企業의 最上位 1位~10位中에 포함된다고 한다.

韓國의 大企業集團은 製造業의 各分野에 있어서 뿐 아니라, 製造業 이외의 分野(이를테면 貿易, 建設, 用役, 金融, 不動產, 運輸·倉庫, 宿泊, 飲食, 都小賣 등)에서도 支配的인 위치를 構築했다. 大企業集團의 이러한 膨脹은 특히 1970年代에 이루어졌다. 1970년에 있어서의 30大企業集團의 企業體數는 126개였었는데, 1979년에는 그것은 429個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大企業集團의 異常膨脹은 70年代의 輸出政策 및 重化學工業投資政策—政府가 企業에게 投資資金을 마련해 주고 投資에 수반하는 危險을 부담해 주는 政策—의 結果로 이루어졌다. 企業의 所有權은 個人에 歸屬하되, 投資의 意思決定의 主要部分은 政府(특히 權力엘리트)가 하고, 投資資金은 內資에 관하여는 政府指示下의 銀行融資로, 外資에 관해서는 銀行保證下의 外資導入으로 調達하며, 投資가 失敗하면 여러가지 形態의 救濟措置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非對稱的인 制度는 資本主義의 論理를 超越하고 分配의 正義를 度外視하고 오직 ‘壓縮成長’을 追求하는 政策의 產物이었다. 이 制度下에서는 企業主의 見地로 보면 富와 收益은 投資의 規模에 比例하는데 비해, 投資의 危險은 投資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적어지는 傾向이 있었다. 政府가 指定하는 投資優先分野에서 大單位投資가 不實化되면 投資企業은 거의 確實히 救濟金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企業主로 보면 投資規模가 크면 클수록 投資의 安全性은 증가했다. 投資의 安全性과 收益성이 다 같이 投資의 規模에 比例하는 制度下에서 投資의 大規模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當然하였다. 1970年代에 重化學工業에 대한 大企業의 集中投資가 이루어지고 많은 過剩投資 내지 重複投資가

(9) A World Bank Country Study, *Korea-Manag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Vol. II, p. 30.

(10) 예를 들어, 李圭億,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院, 1985.

(11) T. Scitovsky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and South Korea,” in H. J. Lau and H. R. Klein, *Models of Development*, San Francisco, 1986, p. 154.

이루어진 것은 이상과 같은 投資시스템에 의해서였다.

大企業集團의 投資分野는 輸出産業이나 重化學工業分野를 넘어서 점차 政策上的 優先分野 이외의 分野로 擴大되었다. 政策事業을 추진하도록 選定된 大企業集團의 投資에 대해 權力엘리트가 無限責任을 지는 경우, 政府에 의한 支援은 實質的으로 當該企業集團의 모든 投資에 擴大된다. 元來 資本에는 集中과 擴大가 累積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主要事業에 대한 無限權力的 支援이 이루어지는 大企業集團의 경우에 富의 集中과 그 事業領域의 擴大는 엄청난 力動性을 가지고 進行되었다. 그리하여 韓國의 大企業集團은 마침내 國民經濟에서 가장 決定的인 生産要素, 이를테면, 資金 및 高級人力을 寡占化하고, 需要面に 있어서는 good will의 確立을 통한 市場의 寡占化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政府로서도 大企業集團의 過剩肥大와 이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中小企業 萎縮의 現象에 着眼하여, 1974년부터 한편으로는 大企業集團의 過剩膨脹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한 政策을 썼다. 大企業集團의 抑制를 위한 政策으로는 예를 들어, 1974년의 大統領緊急措置 이후로 間歇的으로 執行한 企業公開의 표방, 過度한 負債를 진 企業에 대한 融資의 禁止, 主去來銀行制度의 도입, 1980년에 制定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制定, 非業務用 不動產의 賣却誘導,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融資比率의 示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中小企業育成을 위한 政策은 60년대부터 執行되었는데 1961년에 中小企業銀行의 設立, 1963년의 中小企業의 輸出産業育成方針의 闡明, 1966년의 「中小企業基本法」의 制定 등이 그 主要項目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0年代의 對中小企業政策은 大體로 日本의 政策을 모방한 것이었으며,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經濟的, 社會的 重要性에 대한 認識에 立脚한 것이라기 보다는 主로 輸出增大를 위한 政策의 一環으로 構想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中小企業의 필요성이 차츰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重化學工業이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 즉 大企業의 組立生産을 위한 部品·素材를 供給하기 위하여는 中小企業이 強化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1973년부터 ‘系列化’라는 日本式 用語가 世論 政策論議에 登場하기 시작했고, 1975년에는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이 制定되어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連繫를 強化하는 方針이 세워졌고, 1978년에는 大企業이 中小企業 固有業種에 參與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中小企業事業調整法」이 制定되었다. 1970年代 이후로 政府의 中小企業政策은 大別하여 두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하나는 中小企業에 대한 融資比率을 늘리는(現在 35%)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中小企業의 固有業種을 指定하여 이 分野에 대한 大企業의 參與를 制限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系列化方針은 아직까지도 그리 크게 成功하였다고 볼 수 없다. 中小企業은 大企業의 下請產品을 生

産하기 보다는 獨立的으로 單體商品生産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고, 大企業도 部品・素材의 生産을 中小企業에 依存하는 것보다, 그룹내에 業體를 設立하여 그것을 自體調達하는 것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中小企業의 脆弱이 韓國經濟의 主要 弱點이라는 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 것은 80年代에 접어든 이후이다. 1981년에는 中小企業의 製品을 公共機關이 購買하도록 規定한 「中小企業 購買促進法」이 制定되었고, 1982년에는 中小企業의 近代化・協同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振興法」이 制定되었고, 1986년에는 中小企業의 創業을 돕기 위하여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이 制定되었다. 1986년에는 「工業發展法」이 制定되었는데 이 法은 70年代에 있어서의 個個의 業種을 支援하는 政策方向을 轉換하여 産業의 合理化를 指向하는 工業政策을 펴기도 했다. 70年代에 크게 萎縮된 中小企業이 80年代에 와서는 部分的으로 다소 活氣를 되찾게 된 것은 이러한 政策의 結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80年代 이후의 이러한 政策轉換은 大企業集團으로의 經濟力 集中의 大勢 앞에 큰 成果를 가져 오지 못했다. 韓國의 大企業集團은 앞으로도 계속 國民經濟의 成長率 以上으로 成長할 것이 豫想된다. 特히 앞으로 大企業集團의 投資가 資本集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分野에서 賃金이 上昇하며, 그 製品의 輸出의 增加가 크게 이루어져서 換率의 下落을 催促할 것이 豫想된다.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中小企業에 대하여도 賃金의 上昇, 그리고 換率의 下落이라는 二重의 壓力으로 作用할 것이다.

(4) 韓國政府의 經濟發展政策이 外資導入에 의한 資本과 그 資本에 體화된 技術의 導入을 工業發展의 기초로 삼고, 그렇게 開發된 工業을 土臺로 輸出을 增加시키는 데 최대의 力點을 두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外資는 1次 5個年計劃 당시부터 1985년에 이르는 동안, 언제나 總投資의 중요한 一部를 차지했다. 이 期間동안 外資導入의 實績値는 항상 計劃値를 凌駕했다. 이것은 農林水産業에 대한 投資의 實績値가 그 計劃値에 항상 未達하는 傾向이 있었다는 것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

흔히 韓國의 貿易政策은 價格機構에 순응하면서 自由貿易의 原則에 의하여 推進되었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 見解에 의하면 韓國의 經濟發展이 成功한 것은 韓國이 自由貿易의 原理에 의하여 比較優位가 있는 産業을 輸出産業으로 育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海外에까지 널리 流布되고 있는 이 見解는 一見 妥當한 것 같이 보이지만, 韓國의 貿易政策의 基本性格을 잘 說明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輸出이나 輸入은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國際價格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輸出業者는 그들의 製品에 대해 國際價格 이상의



價格을 받을 수는 없고, 輸入者는 그들의 輸入品에 대해 國際價格 以下를 支拂할 수는 없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는 韓國의 貿易이 價格機構에 順應하여 이루어진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그 反面 韓國政府는 輸出과 輸入의 비용에 대해 幅넓게 介入함으로써 貿易을 調整하였다. 政府는 한편으로는 모든 支援을 다해 輸出의 비용을 輕減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輸入을 選別的으로 抑制했다. 國內産業을 育成하기 위해 完製品의 輸入은 可及的의 抑制하되, 輸出用 原資材나 輸出用 設備投資를 위한 資本財의 輸入은 오히려 獎勵하고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을 위한 資本財 내지 原資材의 輸入도 비교적 적게 抑制했다. 1965年 이후로 徐徐히 輸入自由化政策이 採擇되고, 1967年에 “네가티브시스템”의 制度가 採擇된 이후로, 輸入自由化가 急進展한 것으로 보는 見解가 있으나, 그 당시의 輸入自由化는 輸出産業(및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을 위한 機資材의 輸入을 위한 ‘自由化’에 不過했다. 70年代에 와서는 重化學工業의 育成 이후로 重化學製品의 國內消化를 위해 輸入自由化는 오히려 後退하였고, 1980年代 이후로부터 輸入自由化가 비교적 빠른 速度로 進行되고 있다.

이와 같이 60年代 및 70年代의 韓國의 貿易政策은, ‘壓縮成長’戰略의 一部로 理解되어 야 한다. 그것은 基本的으로 重商主義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5) 끝으로 韓國經濟가 日本經濟, 臺灣經濟와 다른 點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특히 60年代 및 70年代에 있어서의) 및 所得分配의 不均衡이다.

韓國經濟가 日本經濟나 臺灣經濟에 비하여 더 높은 物價上昇率을 보였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 理由는 역시 韓國의 經濟發展이 日本이나 臺灣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強制成長”(forced growth)<sup>(12)</sup>의 性格이 強하였기 때문이다. 즉 “強制成長”의 結果, 인플레이壓力이 나타나면 政府에 의한 物價의 直接統制가 加해지고, 政府의 統制가 強化와 緩和의 起伏을 그리는 過程에서 物價上昇도 屈折型으로 進行된 것이다.

韓國의 所得分配는 臺灣을 除外한 거의 모든 다른 開途國에 비해 衡平이 높다는 것이 많은 開發經濟學者들의 常識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룬 많지 않은 研究<sup>(13)</sup> 結果도 韓國의 所得分配는 82년까지는 惡化되었으나, 82年 이후에는 徐徐히 改善되고 있다는 結論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結果는 資料上的 문제 및 概念上的 문제로 말미암아 韓國經濟에 있어서의 衡平의 문제의 全貌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點에 관해서는 筆者도 다른 글<sup>(14)</sup>에서 詳論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言及할 겨를이 없다.

(12) 이 表現은 T. Scitovsky의 表現이다. T. Scitovsky, 前掲論文 參照.

(13) 예를 들어,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下), 韓國開發研究院, 1979.

(14) 趙淳, 「韓國에 있어서의 衡平의 諸問題」, 『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會 論文集』, 韓國經濟學會, 1988.

한 마디로 所得分配의 衡平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政策配慮가 없고, 오직 ‘壓縮成長’만을 추구했는데도 所得分配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일 것이다. 租稅의 逆進性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相續稅는 아주 微弱하며, 不實企業支援은 계속되고 있고, 「公正去來法」은 死文이나 다름 없고, 勞組는 有名無實하며, 財閥의 擴張과 都市에 대한 人口集中은 그칠 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所得分配의 衡平이 改善된다면 이것은 奇蹟이 아닐 수 없다.

## V. 結 語

‘壓縮成長’은 韓國과 같은 人力이 풍부한 後進國이 先進國에서 資本과 技術을 손쉽게 도입함으로써 이루는 高度成長이다. 앞으로도 韓國의 技術水準과 先進國의 그것 사이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고, 韓國은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당분간은 壓縮成長過程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현재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나 심각한 挑戰에 直面하고 있다. 對內的으로는 ‘民主化’, 對外的으로는 ‘國際化’의 도전을 받고 있다.

經濟의 側面으로 보자면, ‘民主化’는 壓縮成長過程에서 抑壓됐던 不衡平의 是正의 要求를 의미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의 壓縮成長은 不衡平과 不均衡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基盤은 의외로 脆弱한 一面이 있다. 韓國經濟가 높은 成長率을 보이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將來를 樂觀하지 않는 見解가 아직도 강한 理由는 그 不均衡이 到處에 散在해 있고 또 너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러한 不均衡의 是正이 韓國經濟의 長短期課題中的의 하나이다. 韓國經濟가 과연 그 自體의 發想과 努力으로 不均衡 위에서 이룩한 ‘壓縮成長’을 均衡의 軌道 위로 옮겨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비단 韓國人뿐만 아니라 世界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編輯者 註: 이 글을 쓴 趙淳박사는 1988년 12월 부총리겸 經 濟 計 劃 廳 長 官으로 임각하게 되어 이 글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미처 보완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